

# “독립운동 참여자 명예 선양 나서야”

### 민주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대표 발의... “왜곡된 기점·역사 바로세워야”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진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 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경남·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일본제국주의에 따른 국권침탈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사관 편술 기구였던 ‘조선사편수회’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한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국권을 침탈했으며, 이어 1895년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히 침탈 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침탈받던 시기에 분연히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점에 대해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년 넘게 답습해 온 만큼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왜곡된 기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항일독립운동 기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농촌인구감소, 지역위기 대응, 대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 ‘농촌인구감소·지역위기 대안을 말하다’

### 오은미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전남도의회 공동 토론회 지역별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성 등 제안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29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농촌인구감소, 지역위기 대응 대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농촌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당 소속 전북·전남 지역 도의원이 집중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는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전북대학교 김운영 교수·전북자치도청 최재용 국장·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강영석 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러 김운영 교수는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르면 3년 주기의 계획 수립이 급변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정책실장은 “주민 주도적(자조, 자립,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 서비스 제공 주체(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며, “지역주민-특화공동체-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주체로 가는 단계적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영모 선임 연구위원은 “농촌정책의 전략·정책변화와 지역사회의 대응과 준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3월 29일)과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4년 8월 17일)의 기본방향, 방향과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영석 정책실장은 “주민 주도적(자조, 자립,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 서비스 제공 주체(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며, “지역주민-특화공동체-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주체로 가는 단계적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필요 사회적서비스 부족과 부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지역침체 등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3차 공동 토론회를 오는 10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방문한 민주 전현희 의원

# “尹 위헌·위법 적시한 탄핵발의문 직접 쓸 것”

### 호남 당원·지방의원 간담회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관련 “민주화 성지, 개혁의 상징 호남서 힘 실어주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29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민주당 호남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29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민주당 호남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직접 겪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불법을 반드시 되풀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목표로 최고위원에 나왔다”며,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로서 몸과 말이 아닌 치밀한 법리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원·권익위 고위간부 등 16명에 대해 1,000장에 가까운 고발장을 직접 써 고발했다”며, “그 결과 감사원과 권익위는 공수처로부터 2주간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출신 변호사로 제18대(비례대표)·제20대(강남을) 국회의원, 제2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만호 기자

## “농업, 국가전략산업·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해야”

### 김정수 도의원,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식량주권·안보 실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도 주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나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 5천 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 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리 농정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시장 경제 중심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사회를 빛낸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2024 차매 관리 개선 정책 활성화 및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행 행사는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의 등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국위선양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치하하는 시상식이다.

정종복 의원의 경우 최근 ‘차매가족 휴가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차매 관련 정책 개선과 대안 발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만호 기자

“이제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괴될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식량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 경제 중심의 농정 체계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은 단순한 산업종사자로서 농민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

## 윤수봉 도의원, 지사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29일 “이서 혁신도시 지사울공원(체육시설) 방문객 주차편의 제공 및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 /p>< /div>< div data-bbox=



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혁신도시 등 도시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원 및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 교통안전 및 지역 주민 주차편의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최형열 도의원,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장은(더불어민주당, 전주5) 지난 26일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지확장의 필요성과 전시공간의 효율화 및 운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급 강화를 위해 내부 시설 재구성이 필요하며 거점형 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도내 군 및 전남·충청 인접 시·군 골목슈퍼의 이용 증가로 내방객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안정적 상품공급과 취급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부지면적 확대와 소비트렌드 반영을 위한 소포장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